쇠고기 추가협상 성실이행 합의

한-미 정상회담…FTA 조기 비준·북핵 공조도 논의

G8 확대정상회의 '탄소 감축 개도국 인센티브' 제안

G8(선진8개국) 확대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연쇄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 공조 및 경제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일본의 후쿠다 야스오 총리와 환담을 한 자리에서는 일본이 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의 일본 영유권 주장을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 일본 방문의 '메인이벤트'인 G8 확대정상회의에 참석,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히며 다자외교 무대 데뷔전을 치렀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012년 이후 지구의 기후변화 체제 설립의 핵심 과제는 (탄소 감축을 위한) 선진국의 확고한 중기 목표 제시와 더불어 개도국들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이라며 "개도국의 감축 실적에 대해 상업적 인센티브를 주는 탄소 크레딧을 부여한다면 시장 원리에 의해 투자가 확대되고 경제는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은 기후변화의 범세계적 도전을 맞이해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가교역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동시에 경제가 성장하는 녹색 성장과 저 탄소 사회로의 이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찬 회의를 끝으로 G8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방안과 함께 극동 시베리아 개발 방안을 포함한 에너지분야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부시 미국 대통령과 약 1시간 동안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 4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 강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2차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또 최근 논란이 된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관련, 양국간 쇠고기 추가협상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인들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두 정상은 이밖에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재개되는 북핵 6자회담을 비롯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주한미군 이전 비용 분담, 비자면제 프로그램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내달 5~6일로 예정된 부시 대통령 방한 일정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끝으로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늦게 전용기편으로 귀국했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이 9일 일본 홋카이도 도야코 윈저호텔에서 열린 G8 기후변화회의에 참석하기 전 부시 미국대통령과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실효성 없는 합의만 봇물…G8 정상회의 폐막

일본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사흘간 열린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가 9일 오후 신흥 경제 8개국과의 확대회의를 끝으로 폐막했다.

G8 정상과 이명박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등 세계 22개국 정상은 G8 정상회담 및 확대정상회담을 통해 지구온난화 문제와 원유·식량가격 급등, 핵 비확산 문제 등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G8 정상들은 2050년까지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장기 목표를 공유키로 하고 원유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북한의 핵포기를 촉구하는 등 현안에 대한 여러가지 대책도 내놨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독일 하일리겐담 정상회담에 이어 1년여만에 열린 이번 회담에서도 곳곳에서 G8 회원국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실효성보다는 상징성에 의미가 있는 합의 내용들이 속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유가 대책에서도 정상들간의 이견이 그대로 노출됐다. G8 정상들은 세계경제 상황이 지난해 하일리겐담 당시에 비해서는 훨씬 심각하다는데는 인식을 같이했다. 고유가 대책으로는 시장의 투명성 향상, 산유국에 대한 증산 요청, 소비국의 에너지 절약, 원자력 이용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상들은 개발도상국들이 원유가 급등의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했던 원유시장을 상대로 한 투기자금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을 하지 않은 선에서 봉합했다. 이는 미국과 영국이 투기자금 규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아프리카 빈곤 문제와 관련, G8 정상들은 농업 생산 증대를 위한 지원 강화, 식량 비축 시스템 정비 등에 합의했다. 아울러 지난해 하일리겐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보건 분야에 향후 5년간 600억달러 지원을 실시하는 방안을 재확인했다.

G8는 또 식량가격 급등 대책으로 식량 수출규제 철폐, 식량 이외의 원료를 사용하는 제2세대 바이오 연료 개발, 국제적인 비축 시스템 구축 검토 등을 제시했다. 그나마 수출규제 철폐를 명시한 것은 지난달 로마에서 열린 유엔 식량안보 정상회의 합의보다는 진전된 것이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9개월만에 재개된 북핵 6자회담

北 신고서 검증 방안 마련 초점

北 "지원 속도 더디다" 다음 단계 논의 거부감

북핵 6자 수석대표 회담이 10일 오후 4시(현지시간) 댜오위타이에서 개막한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 참가국들은 지난해 비핵화 2단계를 규정한 '10·3합의'를 채택한 이후 9개월여만에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지난달 26일 북한이 제출한 핵 신고서의 내용을 평가하고 신고서 내용의 검증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이와 함께 아직 남아 있는 비핵화 2단계 조치의 마무리 방안과 3단계 핵포기에 대한 논의 방향, 6자 외교장관회담 개최방안 등도 주요 현안으로 다룰 예정이다.

참가국들은 이번 회담의 결과를 공동성명이나 의장성명 등 공식 문건으로 정리해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8일 베이징에 도착하자 마자 회동했던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9일 오전 다시 만나 핵 신고 내용 검증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힐 차관보는 김 부상과의 8일 양자회동 후 "북한이 최근 제출한 핵 신고서의 내용 검증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회의는 이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면서 "아마 수 일, 수 주, 수 개월이 걸릴 수 있는 검증작업은 서류(검토)는 물론 현장방문,(관계자)인터뷰 등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해 검증 메커니즘 구축이 이번 회담의 최대 현안임을 확인했다.

특히 검증 작업의 '완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단시간 전 통보 후 조사활동 개시' 원칙을 북한이 수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은 북한이 미국이 요구하는 검증 메커니즘을 수용하느냐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불능화에 비해 경제.에너지 지원 속도가 더디다며 다음 단계 논의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어 회담장에서 어떤 입장을 보일 지 주목된다.

한편, 김 숙 본부장은 이날 오후 김계관 부상과 댜오위타이에서 회동했다. 김 본부장과 김 부상의 회동은 지이번이 두번째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회동이다. /연합뉴스

청와대 자료유출 진실공방 가열

유출 기록 원본·사본 대립…위법성 논란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퇴임을 앞두고 재임 기간 대통령 '통치기록'을 사저인 봉하마을로 가져갔다는 의혹이 청와대에서 제기돼, 진실 공방과 함께 위법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가져간 기록이 '원본이냐 사본이냐'부터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내려가기 앞서 각종 국가기밀 자료를 의도적으로 파기한 것 아니냐는 데까지 의혹이 번져 과연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측은 노 전 대통령이 '참여정부' 당시 전자문서 시스템인 'e지원'의 하드디스크 원본을 빼내 통치자료를 불법 유출했다고 보고 있다.

결론부터 말해 노 전 대통령이 가져간 자료가 원본이든 사본이든 퇴임 후에 국가기록을 개인 전산시스템으로 옮겨 놨다면 그 자체로 노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이하 대통령기록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현행 대통령기록법 12조는 '대통령 기록물이 공공기관 밖으로 유출돼선 안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공기관이란 국가기록원 또는 대통령기록관 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보다는 현재 노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자료와 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가운데 규모와 내용면에서 어느 쪽이 원본에 가까운가 하는 것이 이번 공방의 핵심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청와대 측 설명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 청와대 전산망 'e지원'과 똑같은 시스템을 차명으로 들여와 'e지원' 자료의 극히 일부분만 새 시스템의 하드디스크로 옮긴 뒤 두 시스템의 하드디스크를 맞바꾸는 방법으로 기존 'e지원'의 원본 하드디스크를 가져 갔다.

만약 노 전 대통령 측이 이런 방법으로 청와대 'e지원' 시스템의 하드디스크 원본을 사저로 가져 간 것이 사실이라면, 왜 그렇게 번거롭고 복잡한 길을 택했는지가 더 궁금한 대목이라는 것이 이들 전문가의 지적이다.

또 원래 청와대 'e지원'의 원본 하드디스크를 노 전 대통령 측이 가져간 것이 사실이라면 현재 청와대에는 새로 들여 놓은 'e지원' 시스템의 하드디스크가 남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럴 경우 하드디스크의 제조 일련번호와 제조년도 등을 확인하면 금방 어느 쪽 말이 사실인지 드러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연합뉴스

부처 요구 내년 예산

276조원

정부 부처들이 내년에 쓰겠다며 요구한 예산.기금액이 올해 확정 예산보다 7.4%보다 증가한 27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일·외교 분야 요구액은 2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을 발표하고 오는 9월까지 각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한 뒤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9일 밝혔다. /연합뉴스